

#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사회복지계의 역할

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오승환

# 목차

**1** 한국사회의 문제

**2**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

**3** 사회복지계 역할



1

# 한국사회의 문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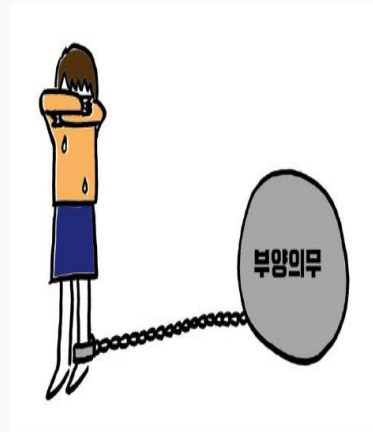
비수급 빈곤층 100만 명 넘어...극빈층보다 생활 열악

[단독] 80세 딸이 100세 엄마 부양하라고?

"빈곤문제 1호 과제,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"

폐지행동 "가난한 이의 가족마저 가난하게 만드는 제도"

(서울=뉴스1) 권혜정 기자 | 2017-03-17 11:48 송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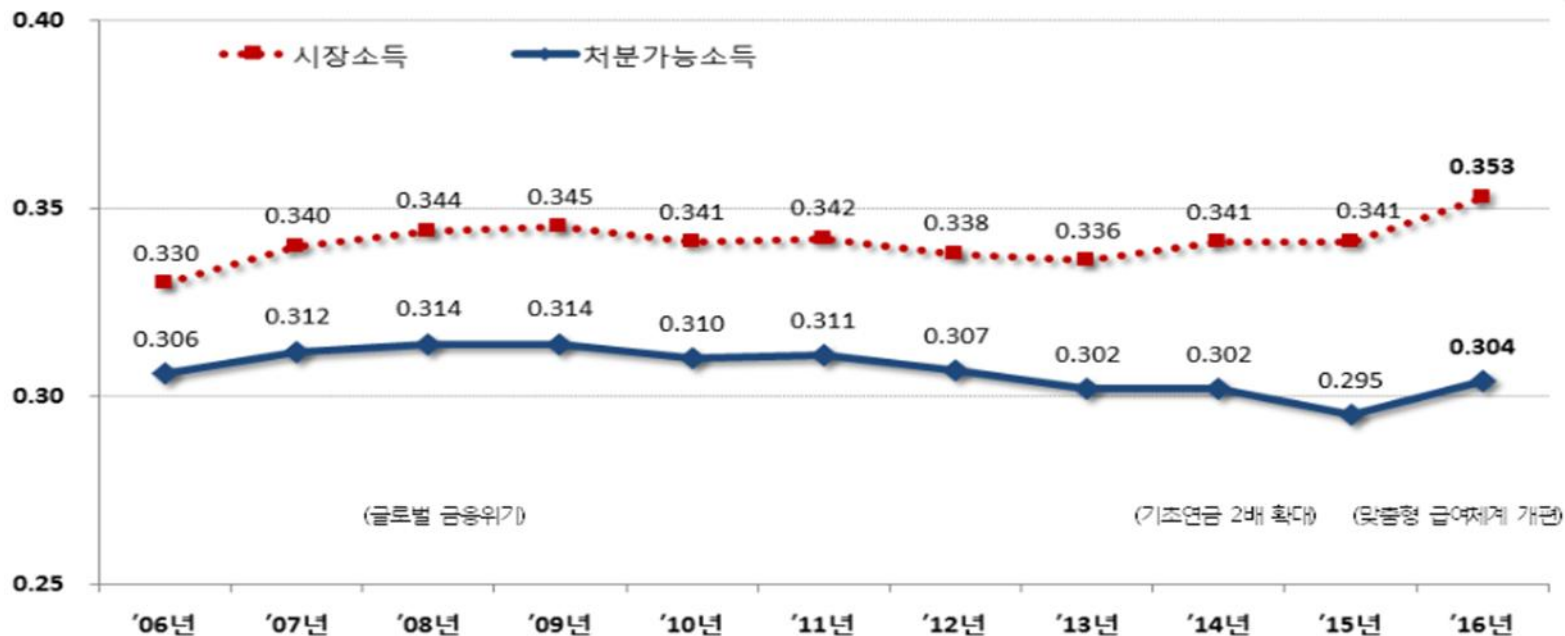


## OECD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

2016년 추산치



자료/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



〈표 1〉 상위 10% 소득집중도의 국제비교

연도	1995년	2000년	2008년	2012년	증감(%p) (1995~2012년)	증감률(%) (1995~2012년)
미국	40.5%	43.1%	46.0%	47.8%	7.3%p	18.0%
한국	29.2%	35.8%	43.4%	44.9%	15.7%p	53.8%
싱가포르	30.2%	38.1%	43.6%	41.9%	11.7%p	38.7%
일본	34.0%	37.2%	40.9%	40.5%	6.5%p	19.1%
영국	38.5%	41.0%	42.0%	39.1%	0.6%p	1.6%
프랑스	32.4%	33.1%	32.6%	32.3%	Δ0.1%p	Δ0.3%
뉴질랜드	32.6%	31.2%	30.0%	31.8%	Δ0.8%p	Δ2.5%
호주	29.1%	31.3%	29.3%	31.0%	1.9%p	6.5%
말레이시아	27.0%	22.5%	24.9%	22.3%	Δ4.7%p	Δ17.4%

자료: The World Top Incomes Database(<http://g-mond.parischoolofeconomics.eu/topincomes>)



지난해 학생 줄었는데 사교육비 총액은 늘어(단위=만명, 조원)



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4년 연속 증가 (단위=원)



소득수준별 사교육비 격차 (단위=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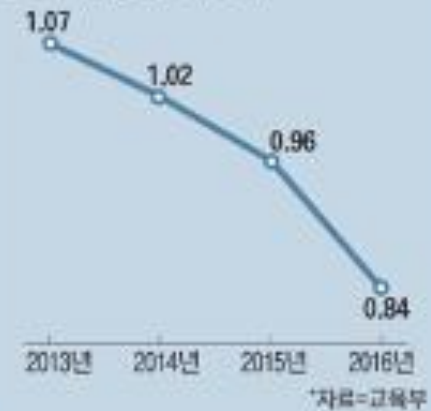


부모 소득 높을수록 4년제 대학 진학을 높여(단위=%)



\*1분위는 소득 하위 20%, 5분위는 상위 20%.  
 자료=한국의 세대 간 사회계층 이동성에 관한 연구  
 (민안식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·최평선 건국대 국제무역학과 교수)

교육청 예산 중 저소득층 지원은 오히려 줄어(단위=조원)



# 노인빈곤 : 선진국과의 비교

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높은 5개국 단위: %



※ 2011년 기준, 65세 이상 가구 중 소득이 중위가구(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) 소득의 절반 미만인 가구의 비율.

자료: 한국보건사회연구원

OECD 회원국 중 노인복지 지출이 적은 5개국 단위: 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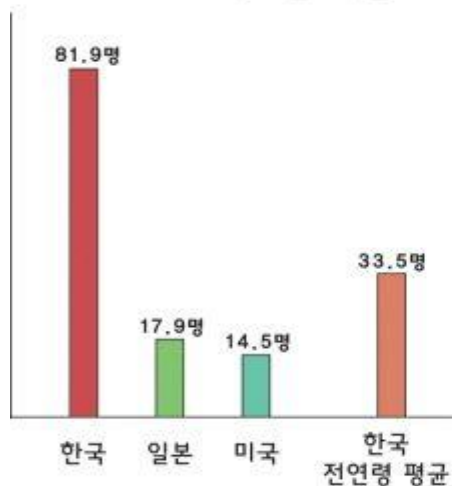
※ GDP 대비 노인복지 지출 비중, 2006-2008년 평균.

자료: OECD

경제개발협력기구(OECD) 국가 노인 빈곤율 (단위: %, 2010년 기준)



65세 이상 노인 자살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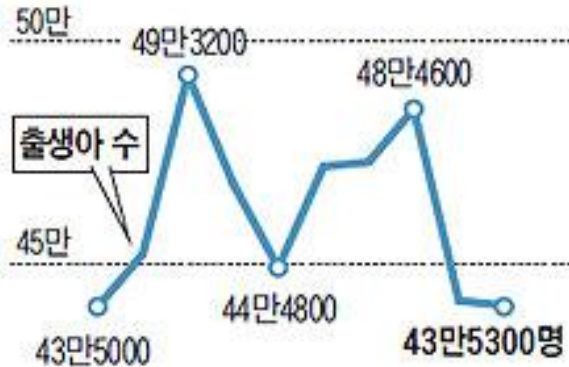
65세 이상 노인 비율 추이 및 전망 (단위: %, 총인구 대비)



자료: OECD

# ■ 저출산 · 고령화

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출생아 수와  
합계출산율 단위: 명



※합계출산율: 여성 1명이 평생  
낳을 수 있는 자녀 수

자료: 통계청

## 연령별 인구구조

2015년 11월1일 기준



## 연령별 비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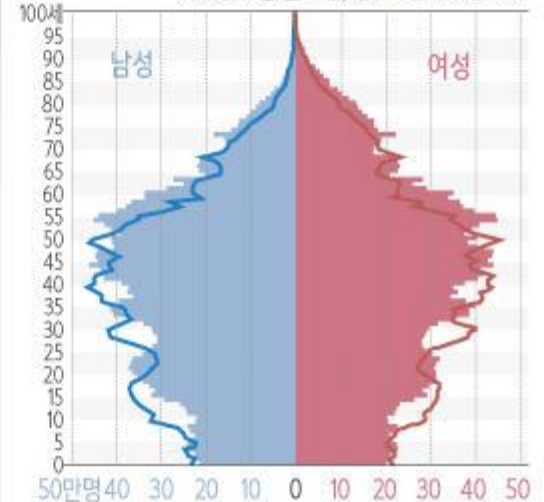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

16.09.06/ 뉴시스 그래픽: 안지혜 기자 hokma@newsis.com

2015년 인구주택총조사

## 남·여 인구 피라미드

2015년 11월1일 기준, 선(=)은 2010년 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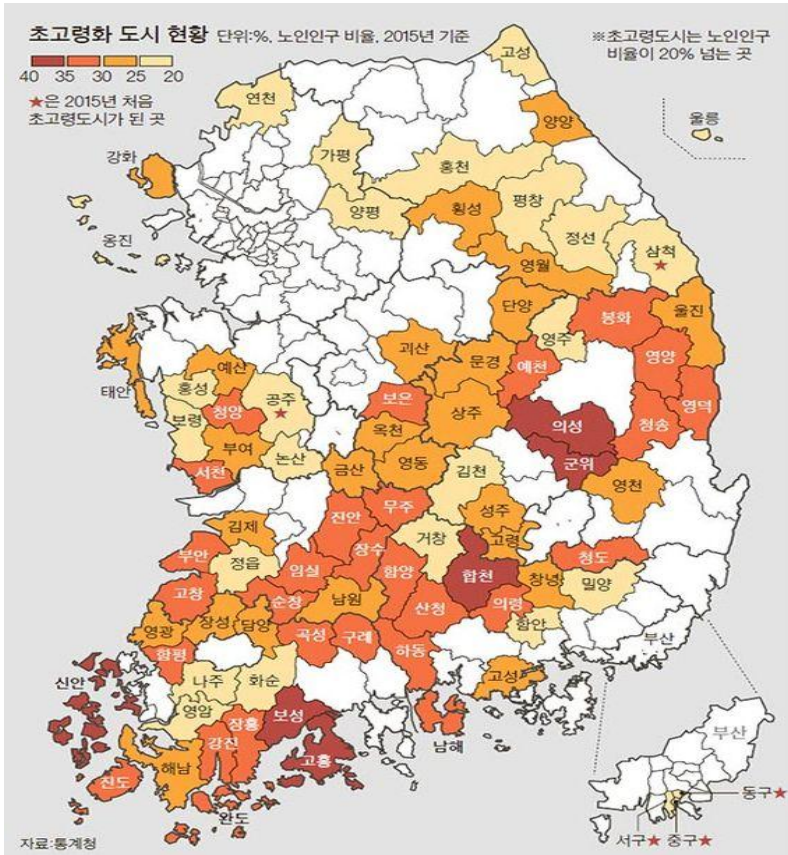


## 고령사회 지역

65세이상 인구비율 14%이상, 단위: %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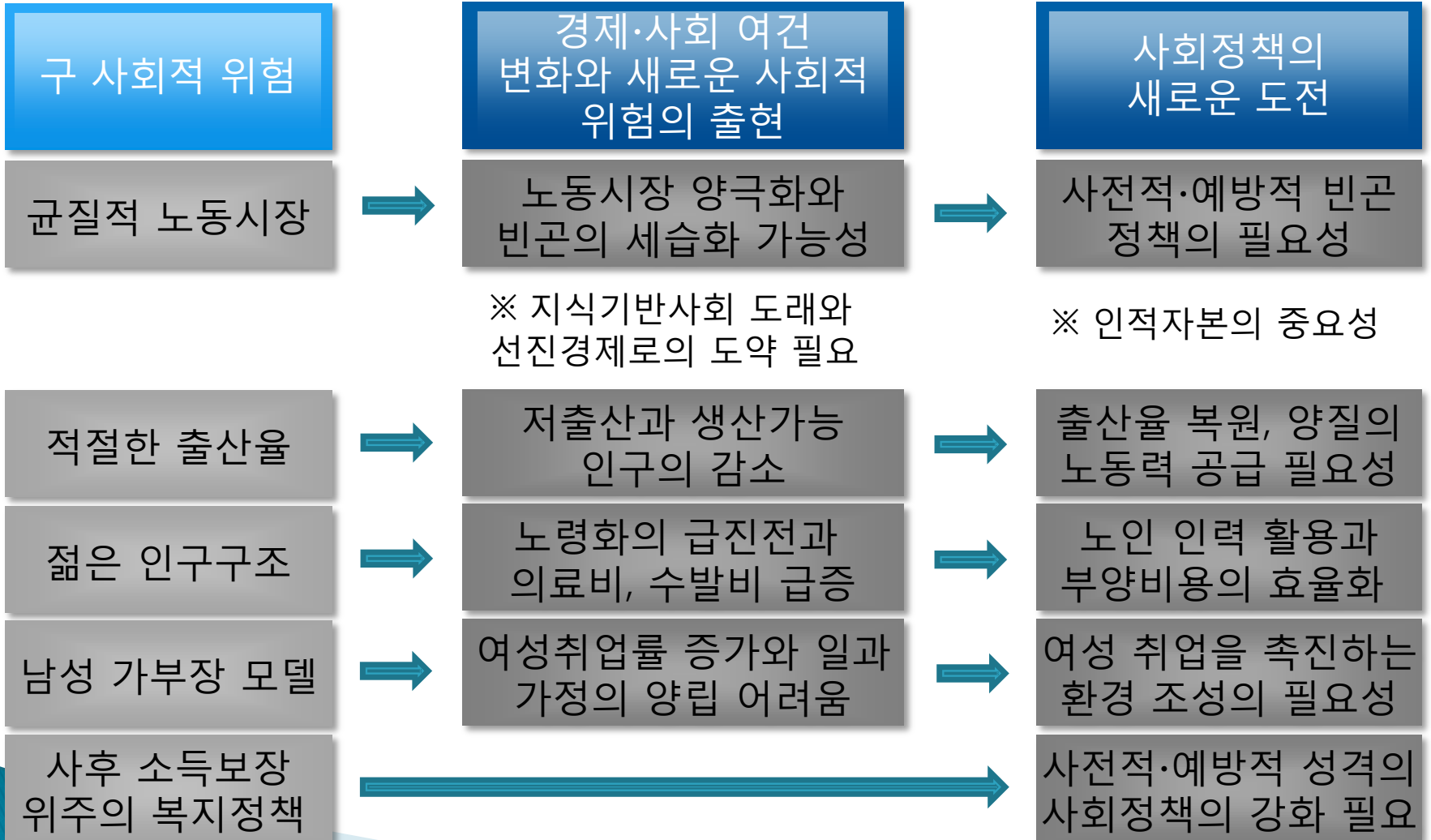


## 시도별 마지막 생존자가 태어나는 때는 합계 출산율 1.19명으로, 인구이동이 없는 것을 전제로 분석



자료: 국회입법조사처

# ■ 우리 사회 새로운 정책 방향





2

#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

# 문재인 정부의 국가 비전

국가비전

## 국민의 나라, 정의로운 대한민국

One Nation, Justice Korea

5대 국정목표

국민이  
주인인 정부

- 국민주권의  
촛불민주주의 실현
- 소통으로 통합하는  
광화문 대통령
- 투명하고 유능한  
정부
- 권력기관의  
민주적 개혁

더불어  
잘사는 경제

-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 
일자리경제
- 활력이 넘치는  
공정경제
-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 
민생경제
- 과학기술 발전이  
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
-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 
창업과 혁신성장

내 삶을  
책임지는 국가

- 모두가 누리는  
포용적 복지국가
- 국가가 책임지는  
보육과 교육
- 국민 안전과 생명을  
지키는 안심사회
- 노동존중·성평등을  
포함한 차별 없는  
공정사회
- 자유와 창의가  
넘치는 문화국가

고르게  
발전하는 지역

- 풀뿌리 민주주의를  
실현하는 자치분권
- 골고루 잘사는  
균형 발전
- 사람이 돌아오는  
농산어촌

평화와  
번영의 한반도

- 강한 안보와  
책임 국방
- 남북 간 화해협력과  
한반도 비핵화
- 국제 협력을 주도하는  
당당한 외교

20대 국정전략

100대 국정과제

15개

26개

32개

11개

16개

소요재원

42.3조원

77.4조원

7조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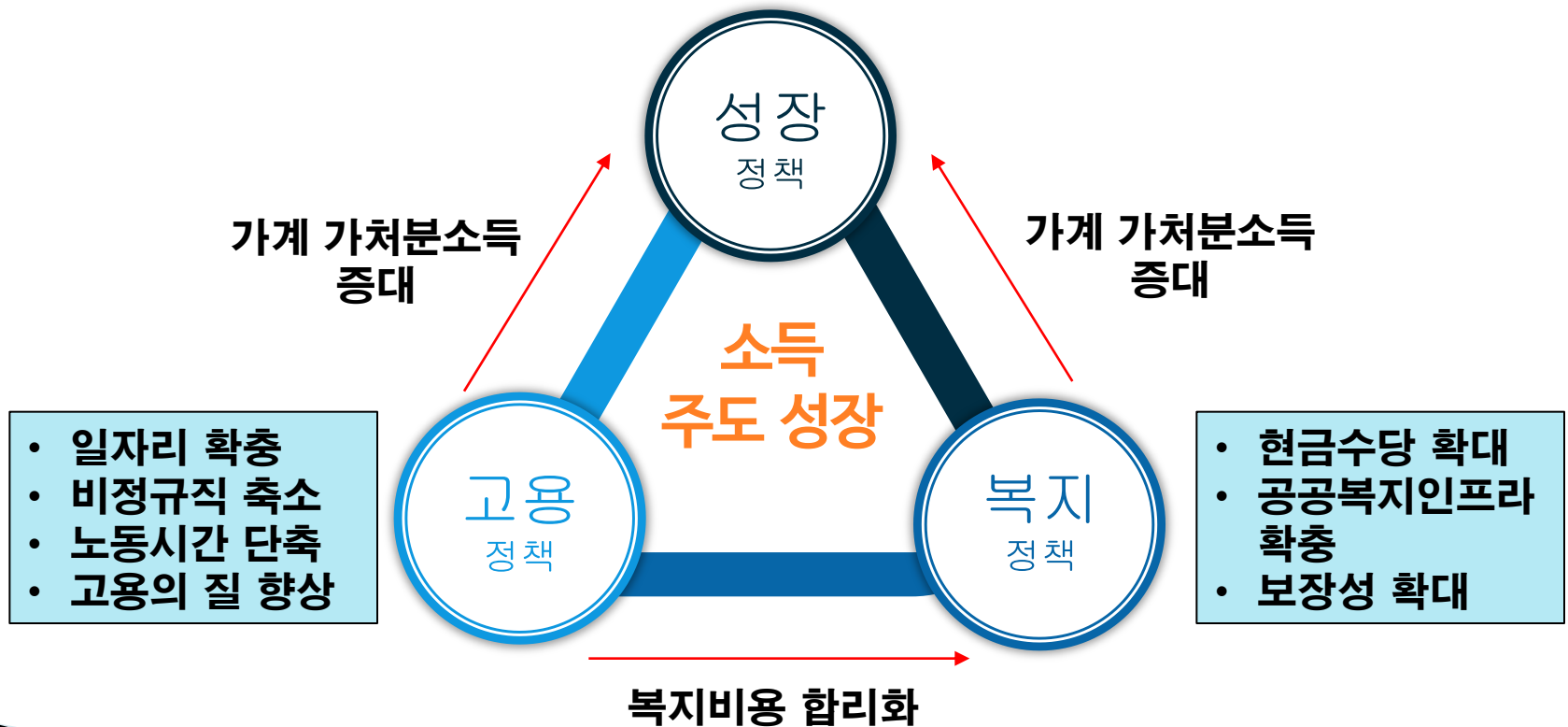
8.4조원

-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자본친화적 소득분배정책에 대한 회의 확산
- 국제노동기구(ILO): 소득불평등과 수요부족이 세계경제 불황 지속의 원인, 기존 이윤주도성장(profit-led growth)의 대안적 성장모델로 '소득주도성장'(income-led growth) 제시
  - ※ 이윤주도성장: 임금억제, 이윤확보 → 기업투자 강화 → 경제성장 촉진
  - ※ 대표적 정책: 법인세 인하, 노동시장 유연화
- 핵심 주장: “소득 분배 개선이 사회적 통합성 및 정치적 안정성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, 경제성장을 제고와 경제 안정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”
  - ※ 최근 IMF(2014), OECD(2014) 등 국제기구에서 심각한 소득불평등이 지속적 성장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음.
  - ※ 국제적 명칭은 '임금주도성장'(wage-led growth)이나 자영업이 많은 한국의 현실을 감안 '소득주도성장'으로 표현
- 소득분배 개선은 1차적 재분배를 담당하는 '시장임금' market wage 뿐만 아니라 2차 분배를 개선하는 '사회적 임금' social wage (사회복지가 임금의 기능을 수행함)의 크기를 늘려야 함.
  - ※ 소득분배개선(예, 최저임금인상) 그리고 복지정책의 확대 →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 → 소비(수요)증가 → 경제성장



# 소득주도성장론과 일자리: 성장, 고용, 복지의 관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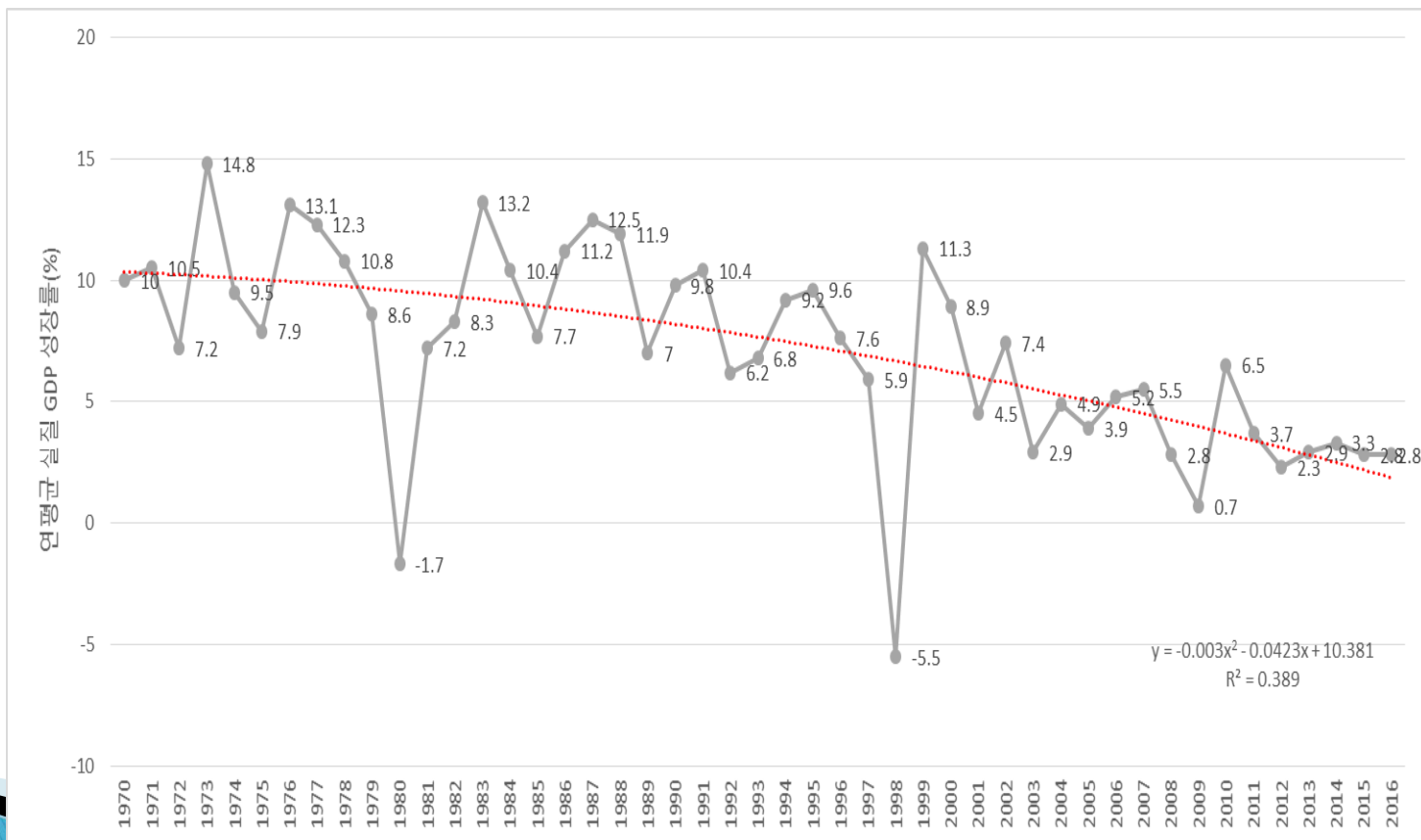
- 수출주도 개방경제에서 내수 기능 강화



#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한국 복지체제의 유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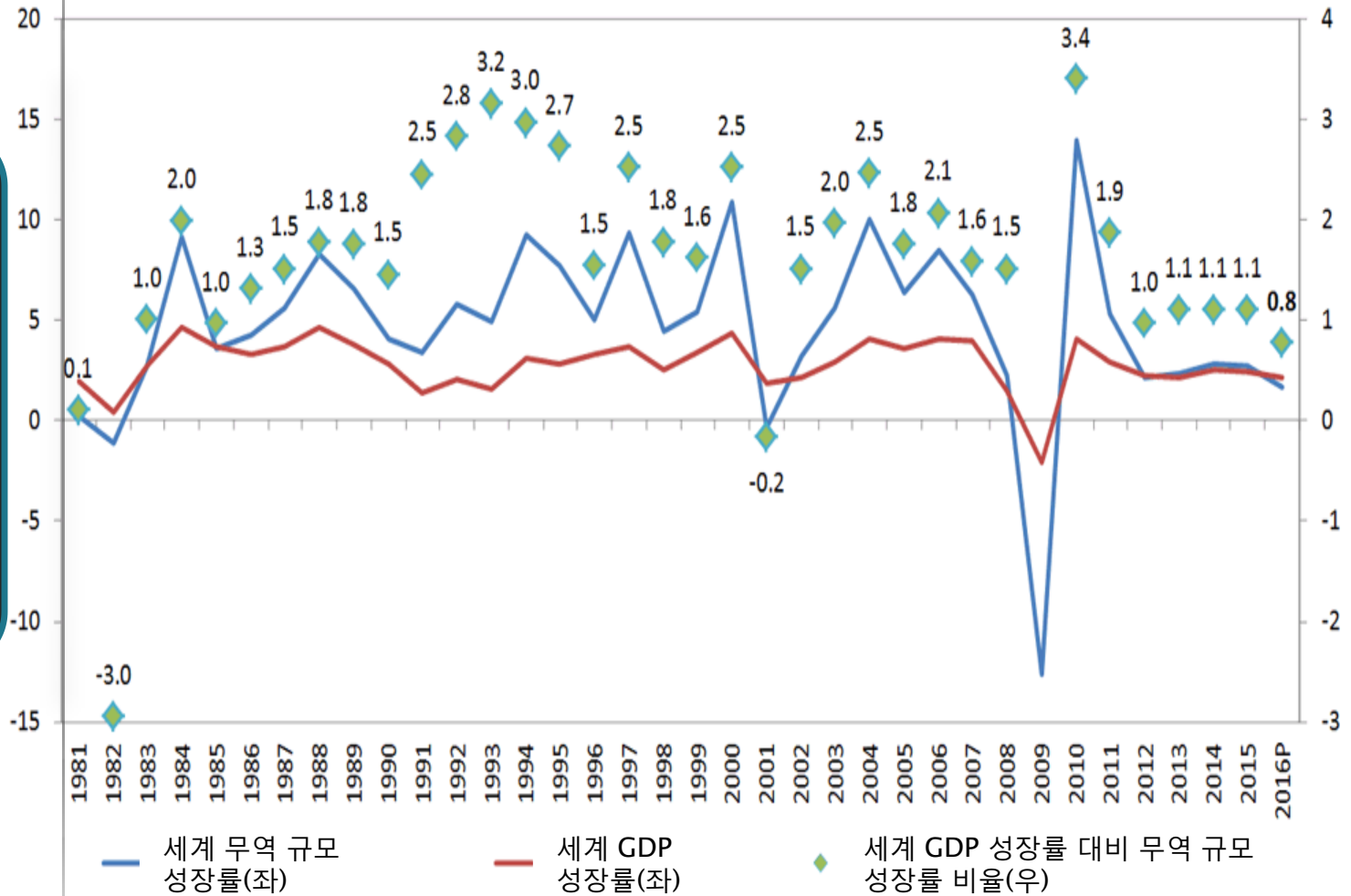
- 경제성장을 통한 낙수효과의 소멸
- 고도성장의 경험으로 인해 시장중심 분배체계의 고착화와 맹신 (시장분배체계>사회적 분배체계)
- 시장의 "본질적 역량" 약화

-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
- 노태우 정부: 9.1%
  - 김영삼 정부: 7.8%
  - 김대중 정부: 5.3%
  - 노무현 정부: 4.5%
  - 이명박 정부: 3.2%
  - 박근혜 정부: 2.8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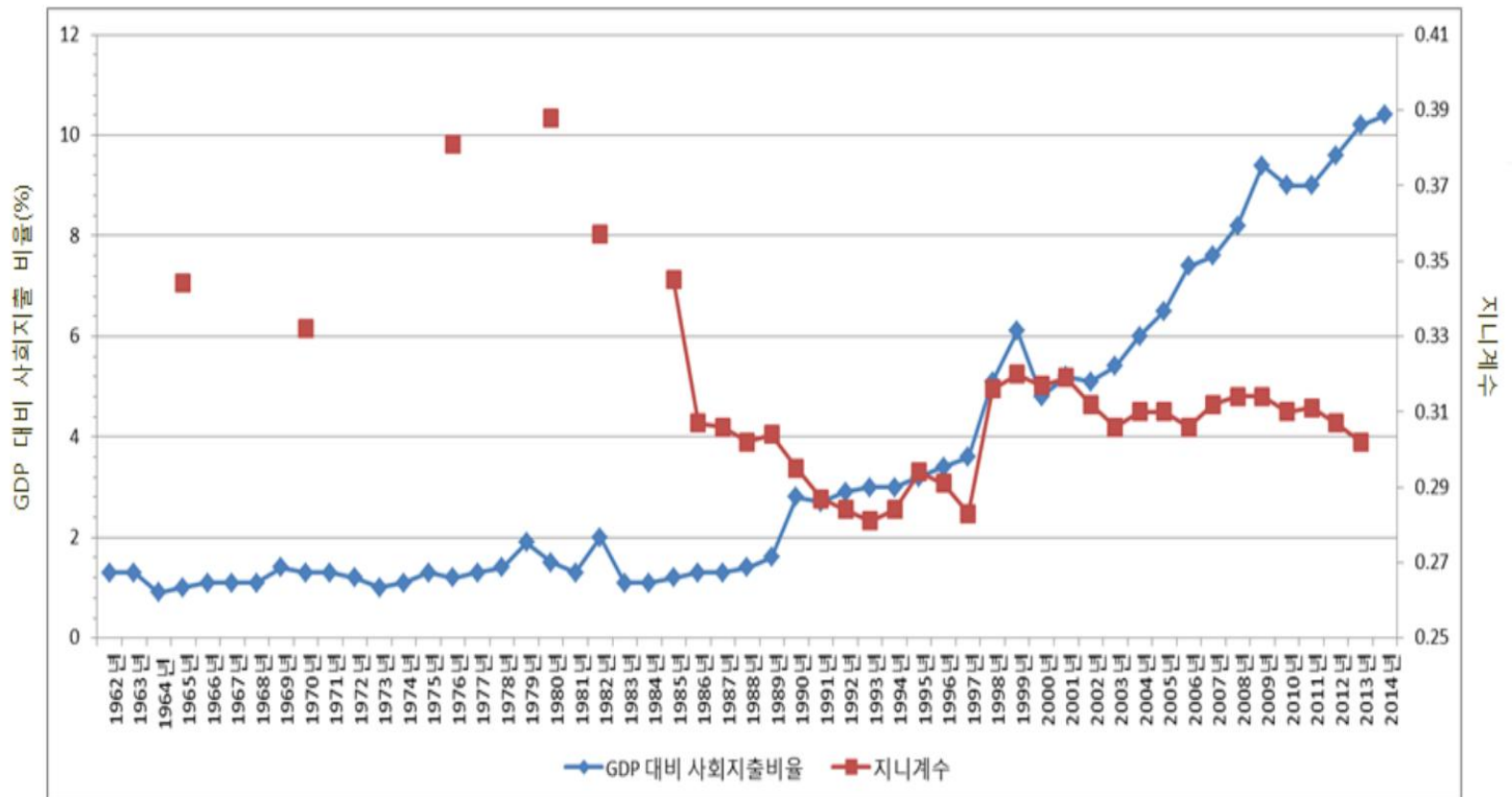
## 세계 GDP 성장률 대비 세계 무역 성장률 비율(%)

수출주도형  
경제성장의  
위기:  
왜 소득보장과  
고용을 통한  
경제체제로의  
전환이  
요구되는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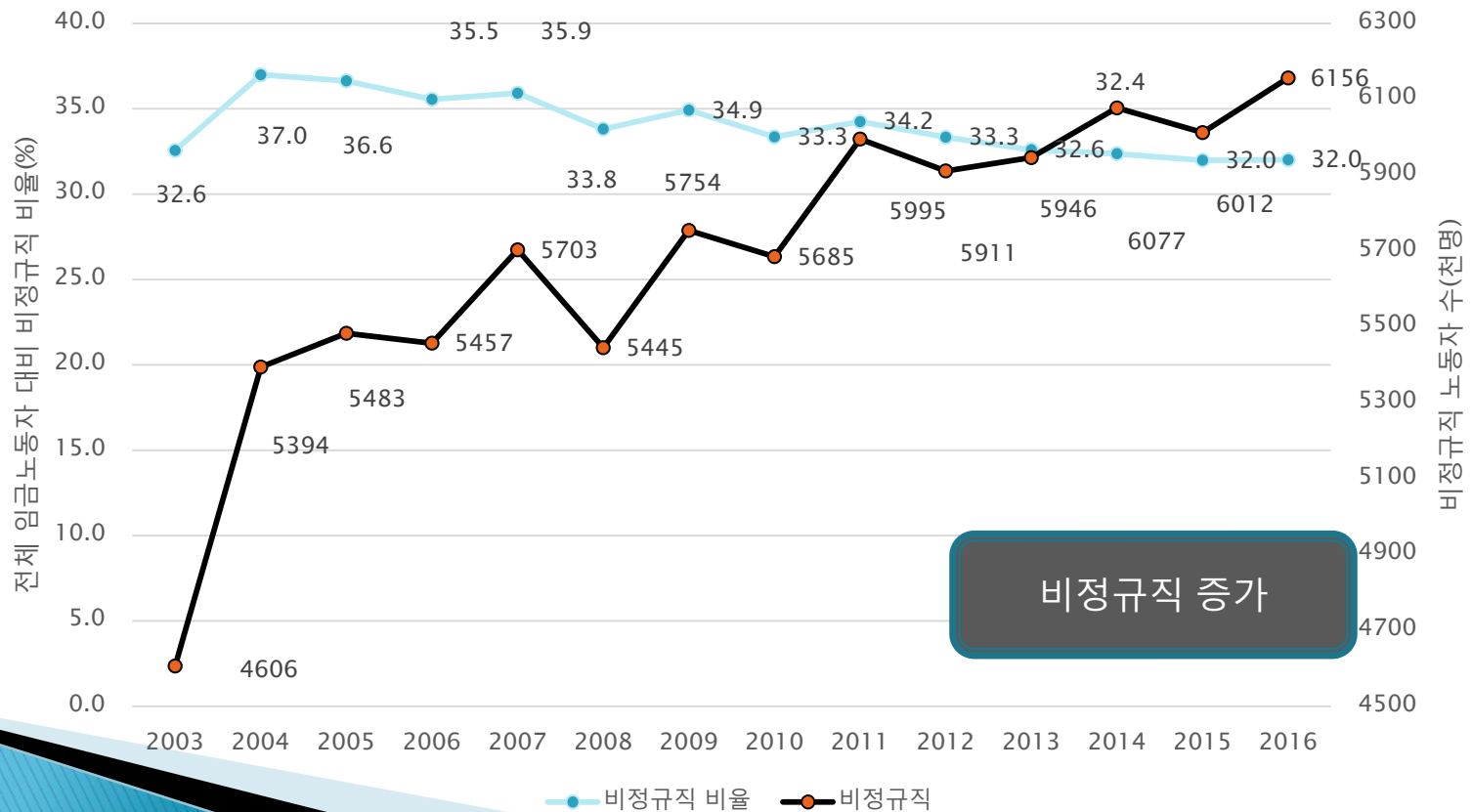


Sources: WTO Secretariat for trade, concensus estimates for GDP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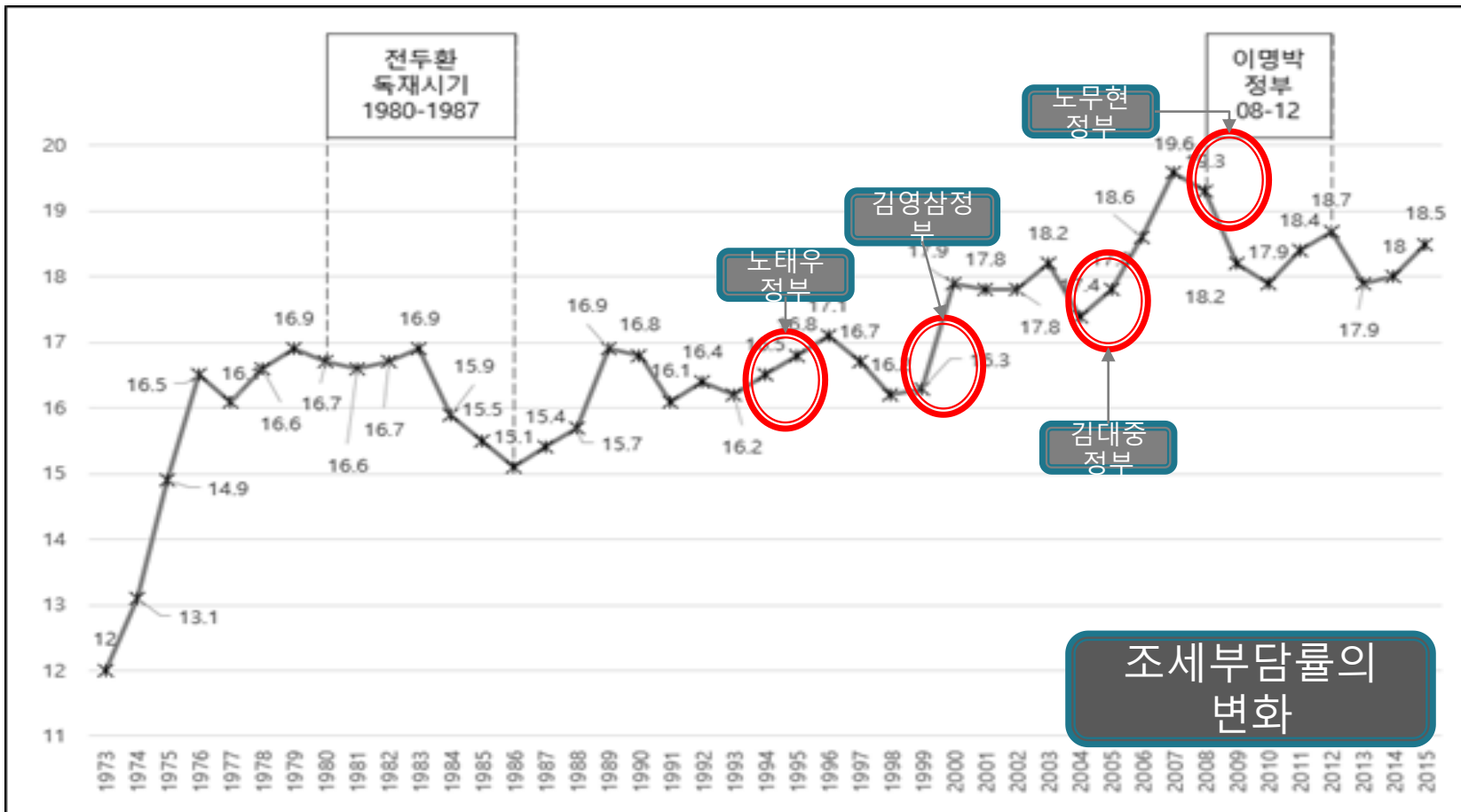
- 경제성장이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함.
-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경제성장은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함.
- 큰 틀에서 민주화 이후 공적 사회보장은 증가했음에도 불평등은 높아지기 시작했고,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높아진 수준 유지.
- 최근 10년 동안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높아졌고, 이후에도 높은 수준 유지



- 빈곤과 불평등이 완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경제성장이 나쁜 일자리가 증가를 수분하고 있기 때문.
- 정부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수의 증가 (2003년 461만 명에서 2016년 616만 명으로 155만 명 증가)
- 비정규직 비율은 노무현정부 시기 37.0%로 가장 높았고, 2016년 현재 32.0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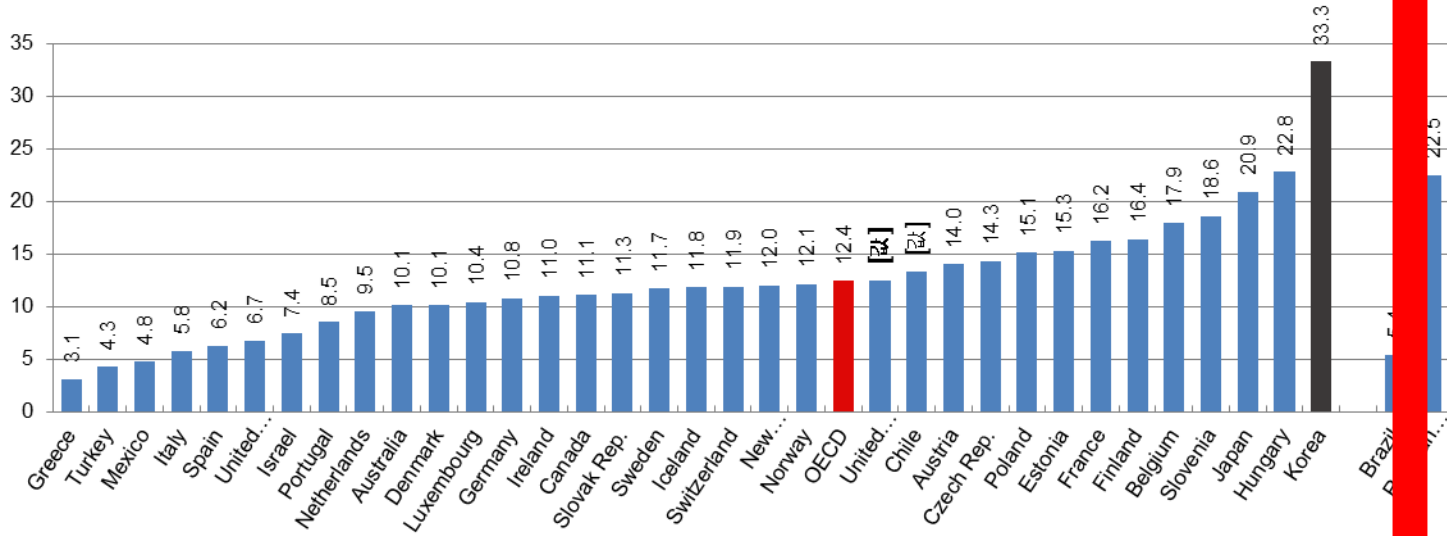




### 조세부담률의 변화

- 낮은 조세 중간계급의 가치분 소득 증가-사적 탈상품화 기제 구축 가능.
- 반면 공적 탈상품화(사회보장)의 토대 약화(공적 복지의 확대 가능성 제약).
- 전두환, 이명박 (다른 정권도 주기적으로 부분적 감세시행)
- 사적 탈상품화(핵가족 중심의 가족주의)는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이 지속될 때 유지 가능.
- 지난 10년 동안 이런 조건의 약화로 사적 탈상품화 기제의 해체 약화 (안정적 일자리 증가, 부동산 자산 가격의 증가, 금융자산의 수익율 등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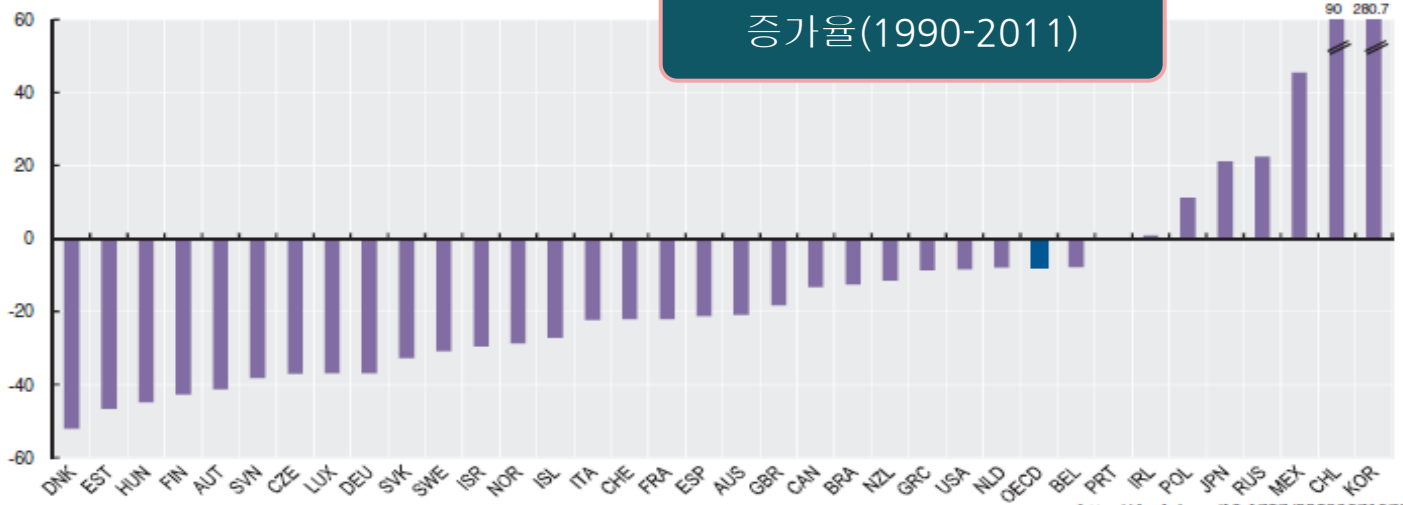
# 자살률



## Change in suicide rates

Percentage, 1990-2011

# 증가율(1990-2011)



#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 비전 : ‘포용적’ 복지국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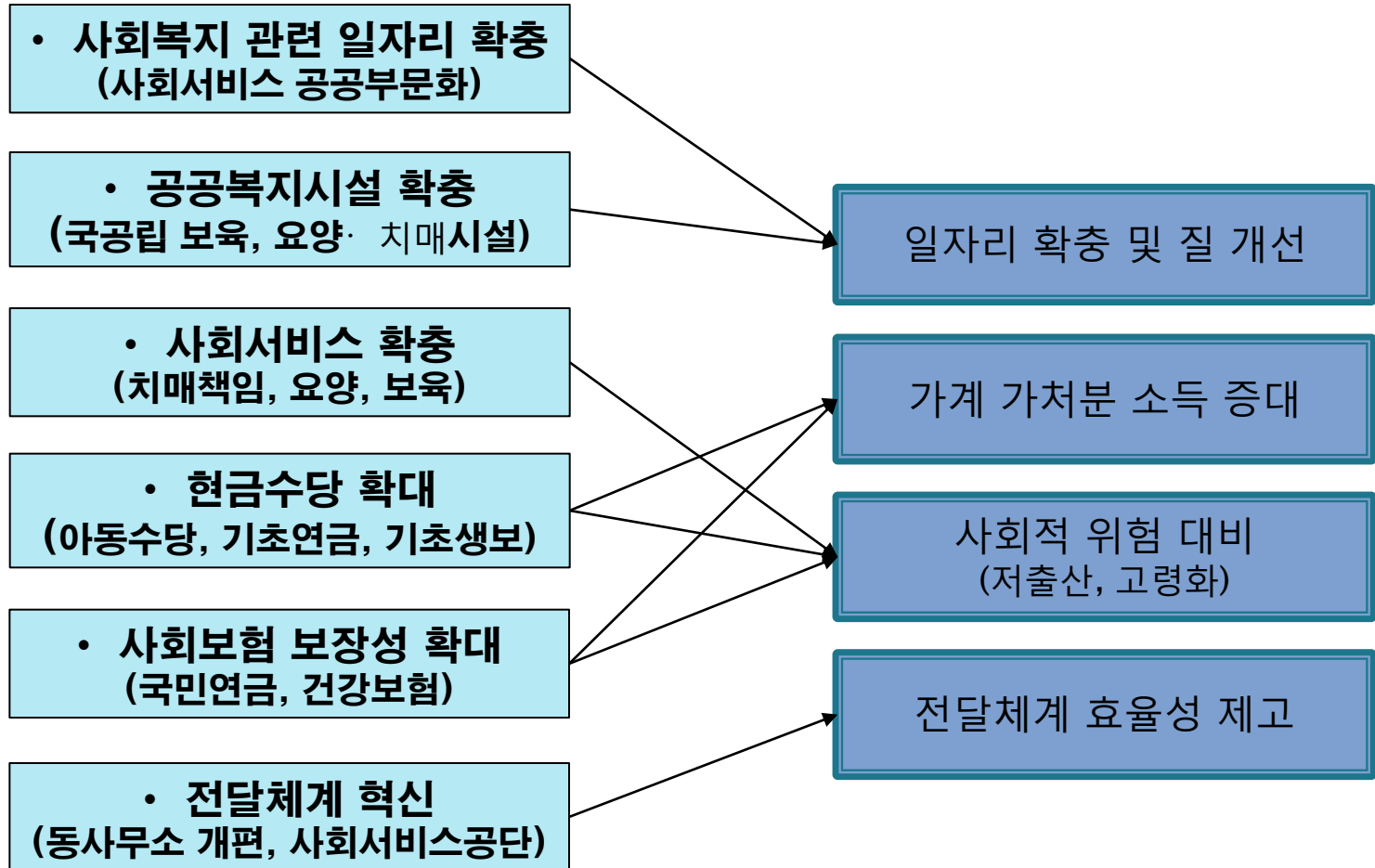
## ■ ‘포용적 성장’ inclusive growth

“경제 성장에 따른 기회가 국민 각계각층에게 주어지며 늘어난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”(OECD)

## ■ ‘포용적’ 복지국가의 한국적 맥락

- 복지제도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복지안전망 안으로 끌어 드림(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보편주의 복지의 실현)
- 경제발전의 수준에 맞추어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복지의 급여수준을 점차적으로 인상함(‘저급여’ 수준의 복지를 적정 수준으로 끌어 올림)

#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방향과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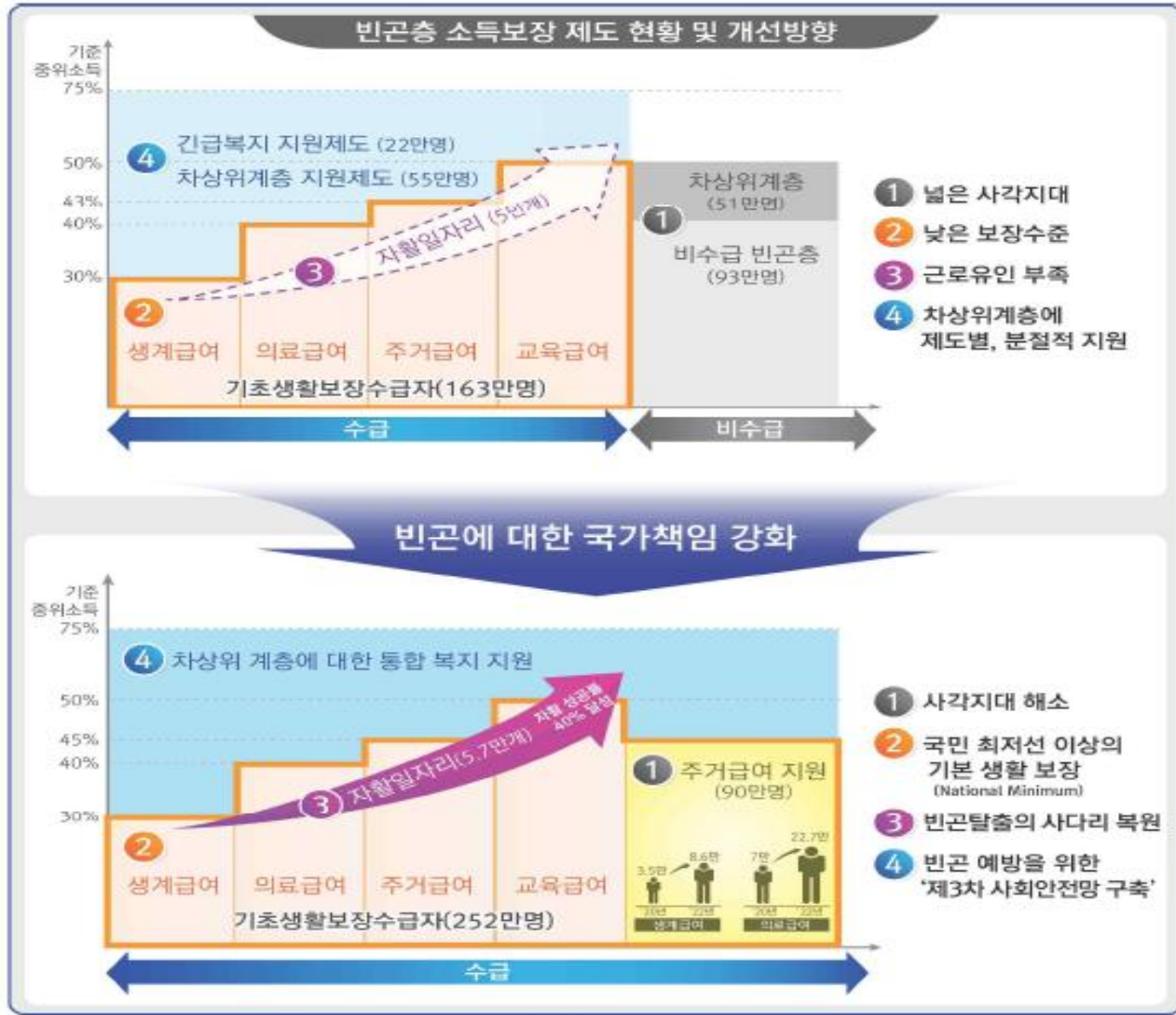


## 주요 복지정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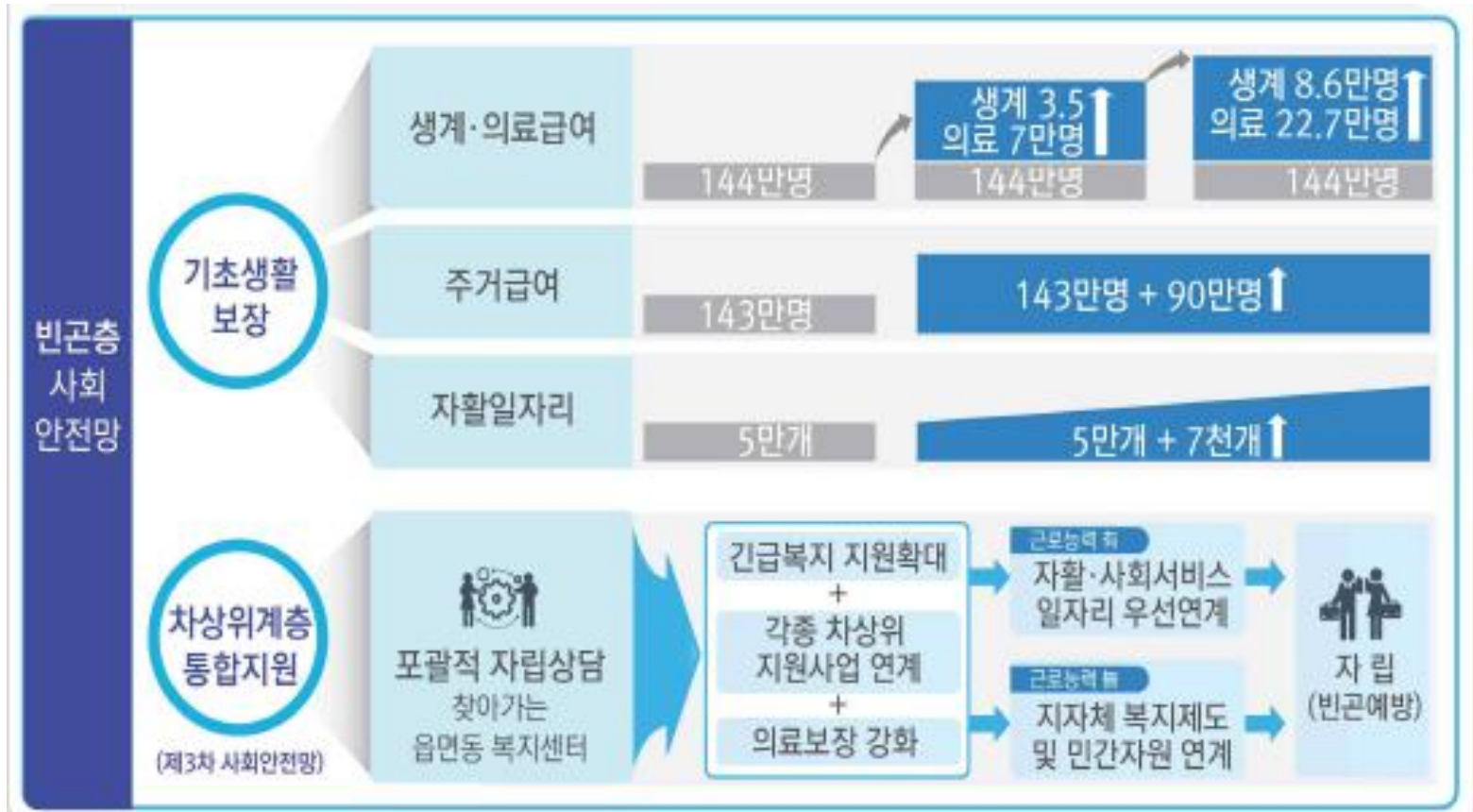
-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(공무원, 사회서비스공단 등)
- 아동수당 (월 10만원)
- 기초연금 ('18년 25만원, '21년 30만원),
- 국민연금-기초연금 연계 폐지,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('18년 재정계산과 연계)
-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
  - 주거급여('18년)
  - 노-노· 노-장 가구 생계· 의료급여 단계적 폐지
-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자수 기준 40%
- 공공요양시설 수용노인 기준 30%
-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
- 두루누리 건강보험 지원



# 빈곤 국가책임 강화



# 빈곤관련 사회안전망



#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

공무원 일자리  
17.4천개



- 소방, 경찰 등 국민생명, 안전 일자리
-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방문간호사 등

사회서비스관련  
일자리 34만개



- 사회서비스공단 일자리
  - 보육교사, 요양보호사, 장애인 활동보조 인력, 아동복지 및 복지관 인력, 정신건강인력 등
- 기타 공공서비스 인력
  - 방문간호, 간호간병통합서비스, 유치원 인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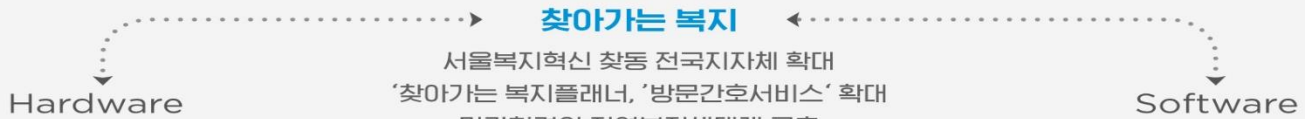
공공부문  
비정규직 정규직  
전환 30만개



-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
  - 총 31만명(기간제 19.1만명, 파견·용역 2.1만명)
- ※ 무기계약직 21.2만명
- 정규직 전환 원칙 : 상시·지속업무(연중 9개월 이상 계속, 향후 2년 이상 예상)는 정규직화, 생명·안전과 밀접한 상시·지속업무는 '직접고용' 정규직화

# 복지전달체계 혁신(공공서비스 플랫폼)

## 문재인표 첫번째 사회혁신 "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"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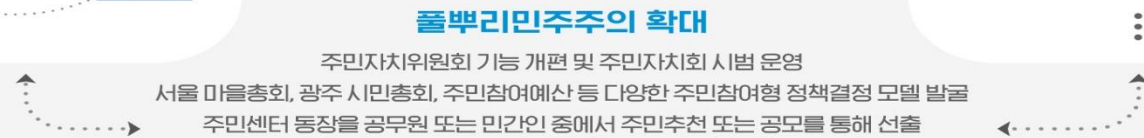
**읍.면.동 주민센터**

'커뮤니티허브센터'로 탈바꿈  
지역사회 유휴공간 개방 및 공간공유 촉진  
행정데이터 공개 통해 지역문제 해결 추진

**문재인정부**  
**"생활기반플랫폼"**  
**행정혁신**  
Hardware + Software

**종합적 공공서비스**

내 동네에 필요한 서비스를  
주민과 함께 창출 및 지속적 업데이트



- **행정혁신** : ‘위계적 행정’ 에서 ‘생활기반 플랫폼 행정’ 으로 전환
  - 읍면동 청사공간을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 공간으로 혁신
  - 청사공간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유휴공간에 대한 공간공유 촉진
  - 정부 데이터 공개, 시민참여 및 쌍방향 소통 등 ‘오픈형 행정’ 으로 전환
- **복지혁신** : 서울시 ‘찾아가는 동주민센터’ 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
  - 읍면동 복지전담 인력 확충 : 복지플래너 등 복지인력 동별 4~5명 추가 배치
    - ※ 복지플래너 : 0세 아동, 65세 노인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안내· 지원하고, 특히 열악한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사례관리 강화
  - 방문 간호서비스 추가 제공 : 동별 방문간호사 인력 1명 추가 배치
  - 마을복지생태계 조성
- **직접민주주의** : ‘정책수혜자’ 에서 정책을 함께 만드는 ‘국정파트너’ 전환
  - ‘주민자치위원회’ 를 실질적 주민대표기구로 기능 확대· 개편
    - ※ ‘주민자치회’ 권한 부여 : ① 마을계획 수립, ②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, ③ 주민자치센터 공간 운영, ④ 지역 공공시설 위수탁
  - 주민참여형 사업계획 수립 : 다양한 주민 주도 정책결정 모델 발굴
  - 플랫폼 행정을 주도할 동장을 공무원 또는 민간인 중에서 주민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해 선출



#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및 기능(개요)

**(설치 목적)** (1) 사회서비스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 
(공공부문 81만개 중 34만개의 일정부분)

(2) 사회서비스분야 시장공급자 과잉의 역기능 완화

**(설치 주체)** 17개 광역시도에 설치(단, 인구규모가 큰  
자치체 별도 설치 허용)

※ 복지부는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국적 기준만  
제정

**(사업 방식)** 공공보육시설, 공공요양시설 직영 운영,  
종사자 직접 고용

※ 요양보호사, 보육교사 등 지역간 이동 근무 가능

**(사업 범위)** 보육사업, 요양사업(시설, 재가) 위주로 하되  
장애인활동보조사업, 지역아동센터,  
사회서비스바우처 등으로 확장

※ 관련법에 사업의 범위만 정하고 사업 선정은  
광역시도에 위임

**(시설 운영)** 시설별 독립채산제 vs 공단통합예산제

**(인력 운영)** 요양보호사, 보육교사 등 공단 종사자는  
지역간 이동 근무 가능

※ 직종별로 직렬을 두어 별도의 임금체계, 직급체계  
적용(예, 보육직렬, 요양직렬, 사회복지직렬 등)

**(설치 시기)** 17년 하반기 별도의 제정법 제안(가칭  
사회서비스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)

※ 과도기간 중에는 지역별 복지재단(예, 서울복지재단)  
혹은 임시기구에서 시설 위탁운영

※ 법률안 제정이 늦어질 경우 행안부의  
지방공단설치법에 의해 설치(관련 규정상  
사회서비스공단 설치에 문제 없음.)(two track 전략)

**(시설 확충 재원)** 17년, 18년에는 일반재정으로 보육시설,  
요양시설 등 확대

※ 19년부터는 국민연금 공공투자방식? (일반 국채 매입  
방식)

※ 쟁점 : (1) 시설투자에 필요한 총 소요재원 규모 (2)  
시설 설치에 필요한 국비/지방비 분담 비용

**(기존 시설과의 관계)**

- (1) 기존에 위탁 운영되던 국공립시설은 기존체제 유지
- (2) 17년 하반기부터 신축, 매입하는 시설부터 공단(혹은  
임시, 기존조직)에서 직영,
- (3) 민간시설은 전환의사가 있는 경우만 매입,  
전환(매입·전환시 일정한 기준을 정해 고용 승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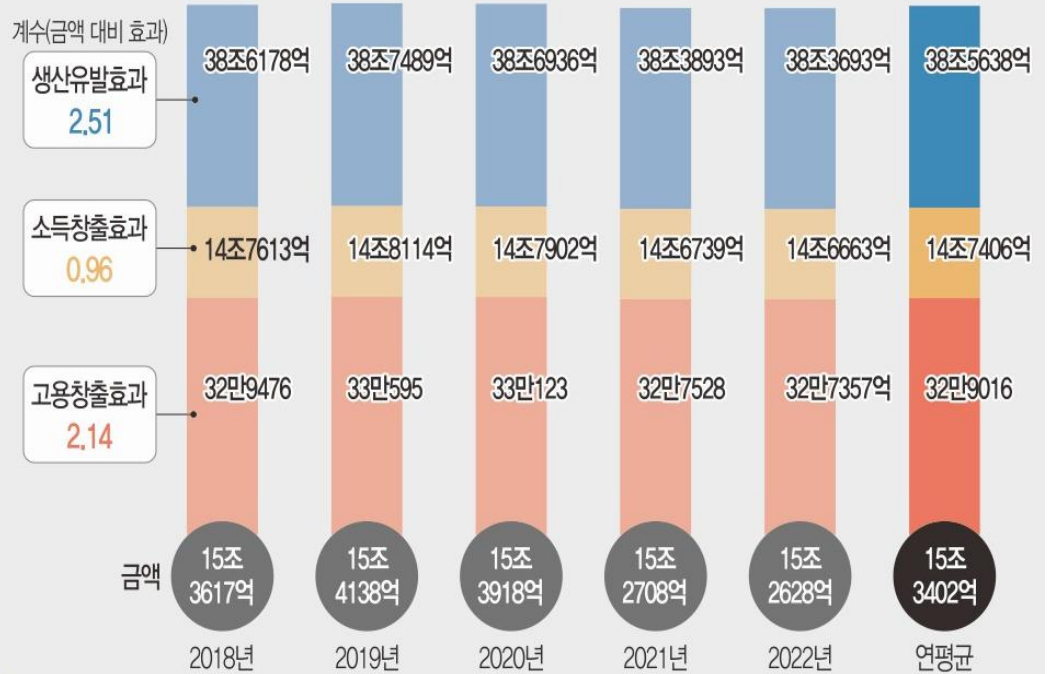


## 현금 수당 확대 : 아동수당

- 목적 :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,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
- 지급대상 : 보호자의 소득수준 무관 0~5세 아동 (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)
  - '18년 기준, 월 평균 253만명 (추산)
- 지급금액 : 월 10만원
- 지급방식 : 현금지급(지자체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금 이외 방식(예: 고향사랑상품권 등) 선택 가능)
- 시행시기 : '18년 7월
- 소요재원 : 국비기준 '18년 1.1조원(지방비 포함 1.5조원), 5년간 총 9.6조원(지방비 포함 13.4조원), 연 평균 1.9조원(지방비 포함 2.7조원)

# 현금 수당 확대 : 아동수당

아동수당 연도별 재원 추계 및 경제적 파급효과 (단위: 원, 명, 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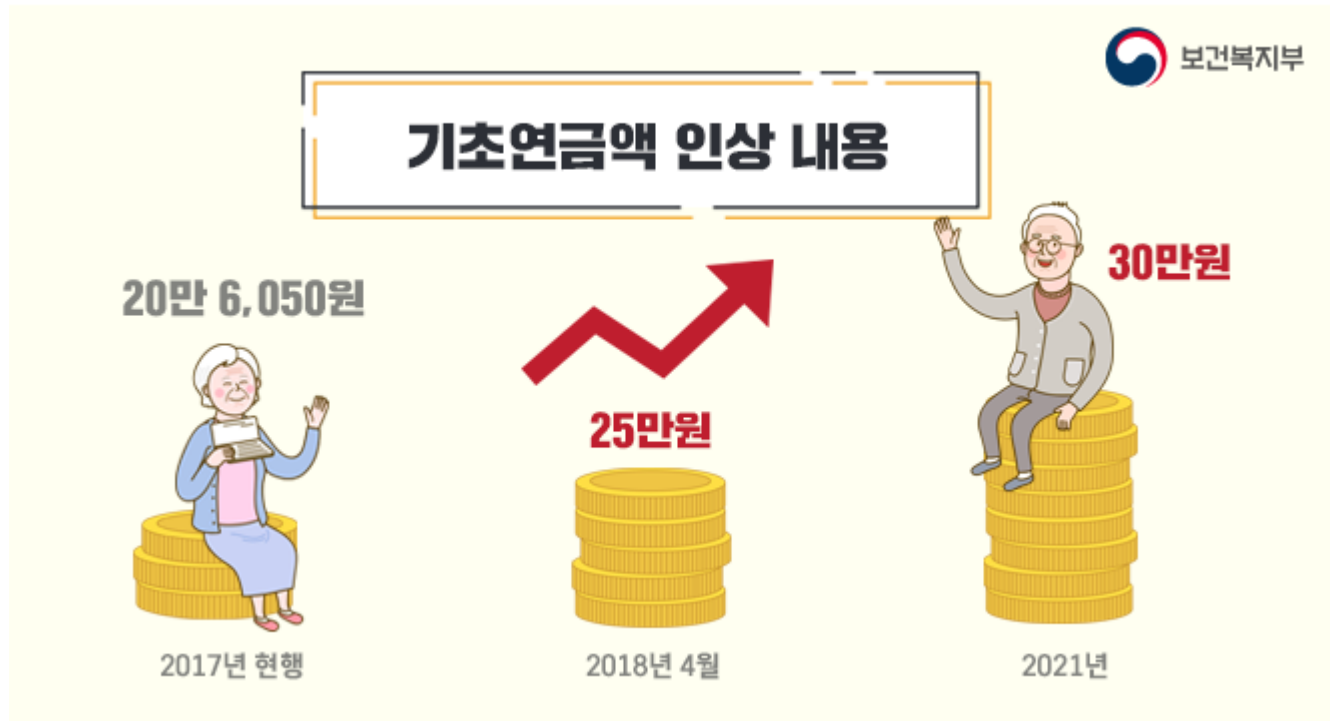


중위소득 200% 이하 가구 0~12세 아동에게 월 10~30만원 차등 지급.  
 셋째 아이 이상인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(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안)

(자료: 국회예산정책처, 서울연구원 김승연 부연구위원)

# 현금 수당 확대 : 기초연금 인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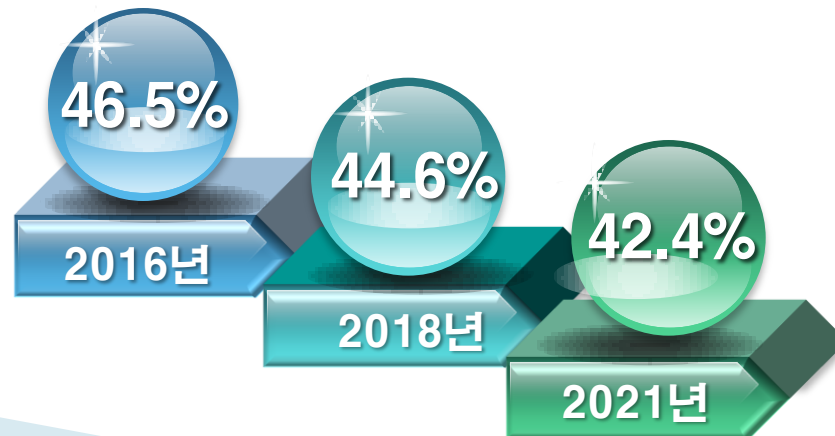
## ■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기초연금액 인상



# 현금 수당 확대 : 기초연금 인상

## ■ 기초연금 인상 관련 주요내용

- 지급대상 :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%(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)
- 개인별 기초연금액 결정 방법 : 국민연금 수급여부 및 수급액에 따라
  - 무연금자와 저연금자 : 전액 지급
  - 국민연금액이 30만9천원 이상일 경우 : 50%까지 기초연금액 감액
- 소요예산 : '18년 2.1조원(국비 기준) 등 향후 5년간 22.5조원(국비 기준)
- 기초연금 인상 시 얻게 되는 효과 : 노인상대 빈곤율 감소



# 치매국가책임제

- 지역사회 치매관리인프라 구축(추경 반영 2,023억원)
  - 205개 치매안심지원센터 신설 (252개 보건소 중 47개는 기 설치됨)  
※ 설치 기관 : 보건소
  - 전담 코디네이터를 통해 1:1 상담에서 치매검진, 사각지대 발굴 등
  -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 확대(34개소를 45개 신설하여 79개로 확충)
  - 치매안심형 주야간 보호 및 요양시설 확충
- 치매안심센터 인력 확충 :
  - 센터당 전담사례관리사 등 15-25명 내외로 구성(모델 다양화)
  - 초기 치매환자 상담을 통한 분류 및 정보 제공, 가족원 상담 등
- 요양비-의료비 부담 대폭완화
  - 중위소득 50%이하 에서 본인부담 등 경감혜택 추진
  - 중증치매환자 본인부담율 10%로 완화,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
- 치매예방 및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: 노인복지관 활용 인지활동서비스 제공
- 전주기 치매 R & D 실시

# 문재인 케어 :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

## 국민들의 의료비 걱정, 왜 발생하나?

1

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가 많고 빠르게 증가

매년 확대되는 건강보험 보장 혜택을 상쇄

2

건강보험이 적용돼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이 높음

취약계층(아동·노인 등)이나 저소득층에겐 큰 부담

3

큰 병에 걸리면 긴급히 많은 의료비가 필요한 상황 발생  
(재난적 의료비)

의료비로 인한 가계 응급 상황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



# 문재인 케어 :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

##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,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

- 2017
  - ☑ 치매의료비 부담 경감    ☑ 아동입원 부담 완화
  - ☑ 난임 건강보험 적용
  - ☑ 65세 이상 틀니 부담 경감
  - ☑ 간호·간병 통합서비스 확산 방안 발표
  - ☑ 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
- 2018
  - ☑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☑ 선택진료 폐지
  - ☑ 신포괄수가 적용 의료기관 확대    ☑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시행
  - ☑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부담 경감
  - ☑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   ☑ 2·3인실 건강보험 적용
- 2019-2022
  - ☑ 일부 1인실 건강보험 적용            ☑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
  - ☑ 간호·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       ☑ 신포괄 대상기관 확대

# 문재인 케어 :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

##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

전략

1

비급여 해소  
및 발생차단

치료에 필요한 비급여

3대 비급여  
(특진, 특실, 간병)

비용  
성형 등

예비급여  
(항목별)

선별급여  
(약제)

신포괄수가  
(기관별)

건강보험 편입

비급여

비급여  
관리강화

전략

2

의료비상한액  
적정관리

취약계층(노인, 아동, 여성,  
장애인 등) 의료비 부담 완화

소득수준에 비례한  
본인부담상한 설정

전략

3

긴급 위기 상황  
지원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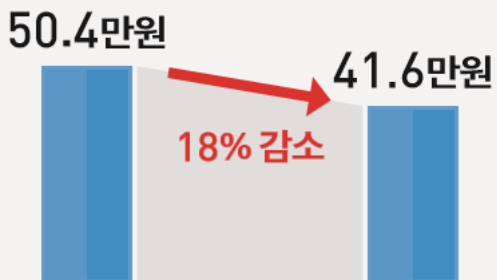
재난적의료비 지원  
대상 확대

의료비 지원  
제도간 연계 강화

# 문재인 케어 :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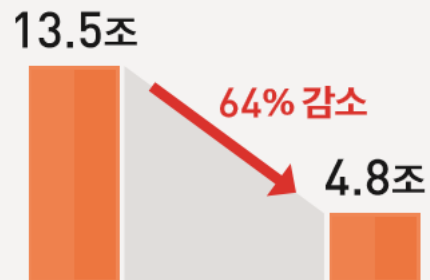
##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, 이렇게 달라집니다

국민 의료비 부담 변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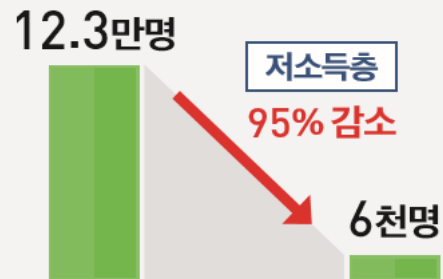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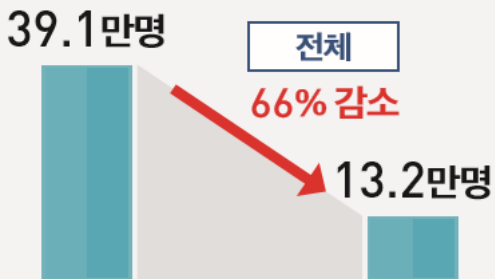
'15년 기준

비급여 의료비 부담 변화



'15년 기준

연간 5백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 수 변화



'14년 기준

#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소요예산

총 178조

42조  
300억  
〈경제부문〉

- 공공일자리 11조400억
- 4차산업혁명 관련 9조5000억
- 청년내일채움공제 4조1000억
- 중소기업지원 1조9000억

- 도시재생 5조8000억
- 농어업직불금 등 1조1000억
- 혁신클러스터 1000억

7조  
〈지역  
균형발전〉

77조  
4000억  
〈복지예산〉

- 기초·장애인연금 23조1000억
- 아동수당지급 10조3000억
- 누리과정지원 5조5000억
- 기초생보기준완화 등 5조4000억
- 기타 33조1000억

- 병사급여인상 4조9000억
- 복핵대응 3조5000억

8조  
4000억  
〈국방예산〉

42조  
9000억  
〈지방지원〉

- 실업급여 등 16조4000억
- 지방이전재원 26조5000억

#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소요예산 자원조달 계획

## 세출절감

<95조4000억>

- 재정지출절감(복지지출 누수방지통한 의무지출 절감 및 SOC 등 재량지출 절감) **60조2000억**
- 기금여유자금 활용 및 이차보전 전환 **35조2000억**

## 세입확충

<82조6000억>

- 국세수입 **77조6000억**
  - 세수자연증가분 60조5000억
  - 비과세감면 정비 11조4000억
  - 탈루소득 과제강화 5조7000억
- 세외수입확충(불공정거래, 과징금확대, 연체·불납결손액 해소) **5조**



**3**

# 사회복지계 역할



#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의 현실은?

1

**전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자격증?**

: 매년 10만명 이상의 자격증 취득, 90만명

2

**사회복지사의 낮은 처우 (2013년 국가인권위 조사)**

: 월 평균 196만원 vs 공무원 237만원

3

**열악한 근무여건 1**

: 평균 주당 근무시간 42.9시간, 연차 유급휴가는 미준수  
취업규칙 작성여부, 근무조건의 법적기준 미준수

4

**낮은 직무만족도 및 인권보장 수준**

: 인권보장수준 10점 만점 5.6점, 직무만족 5점에 2.28점

5

**Ct로 부터 받는 안전의 위협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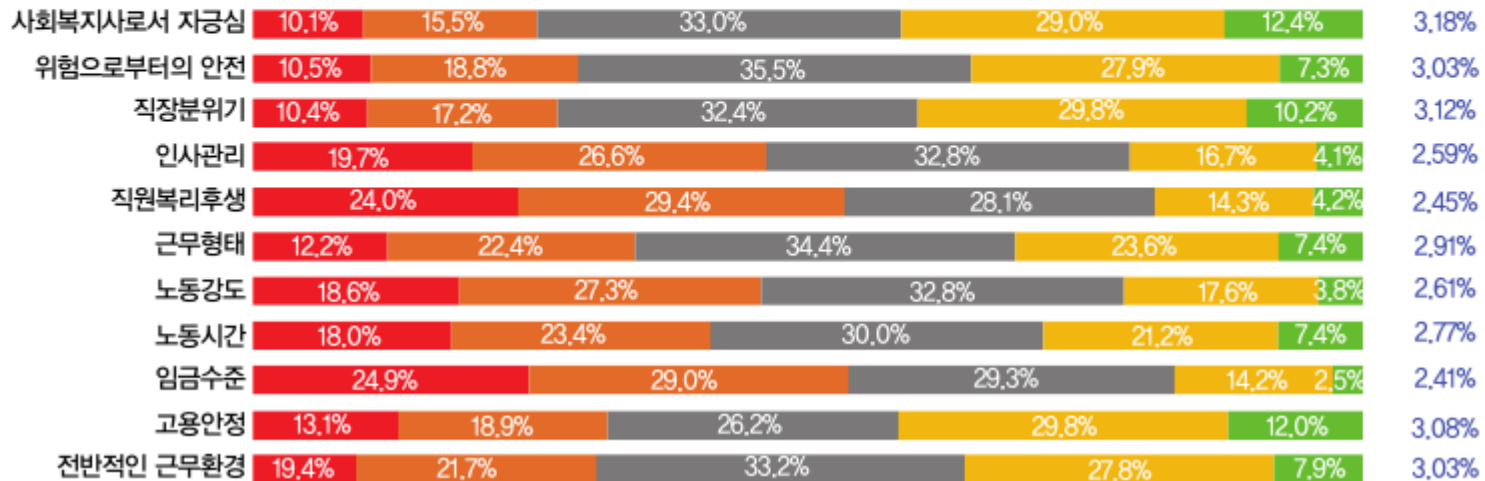
: 언어폭력 28.9%, 신체폭력 8.7%, 성희롱 6.4%, 따돌림 1.1%

# 열악한 사회복지사 근무환경

[그림1] 사회복지사 근무환경



만족도



- ▶ 전반적인 근무환경 만족도 보통 이하 : 74.3% (낮은 만족도)
- ▶ but 사회복지사로서의 자긍심은 높은 편 : 68.9% 보통 이상 만족

# 사회복지계의 문제점

## 개 인

- ◆ 대학교육의 현장성부족
- ◆ 복지 Mind 체화(體化) 부족

## 조 직

- ◆ 근로조건인 부족
- ◆ 민주적 리더십 부족
- ◆ 전문성 향상기회 부족

## 제 도

- ◆ 복지제도의 전반적 부실
- ◆ 복지욕구의 폭발적 증대
- ◆ 인력과 시설에 대한 개선의지 미비
- ◆ 행정감독의 비전문성

### 전문성 실패

- 전망 상실
- 전문적 자부심 부족
- 소진의 만성화/이직

### 기관 실패

- 전문기관으로서의 정체성부족
- 제도와 환경변화에 무감각한 운영

### 제도 실패

- 전달체계의 비효율성
- 예산의 비효율성
- 국민이 복지불신

# 사회복지사 변화의 대안

1

개인차원 : 개인의 노력

2

집단차원 : 사회복지사 전문성 제고

3

제도차원 : 사회복지사 정치참여

4

협회차원 :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 
일자리 창출

## 〈집단차원〉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

- ▶ 3급 폐지, 2급 사회복지사 자격시험 도입
- ▶ 교정복지나 학교 및 특수교육, 군사회복지, 다문화사회복지 등 사회복지 2차 기관으로의 진입을 모색
- ▶ 보수교육 강화
- ▶ 전문가단체의 역할 및 활동력 제고
  - 사회복지사협회 및 각종 전문가단체
- ▶ 사회복지사의 역할 확대 : 개인변화와 사회변화

## 〈제도차원〉 사회복지사 정치 참여

- ▶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 복지국가특별위원회 설치
- ▶ 복지국가 관련 정책 생산, 이슈 견인 및 대응체계 마련
- ▶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복지 총연대회의 출범
  -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사회복지계 직능단체 및 교육계 연대
  -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시 사회복지 정책 제안







**Thank You !**